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 확대 및 산재은폐 강요 행위 근절 추진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제3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주재로 제3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그동안 3차례의 본 위원회와 11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정착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시장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검토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과제 중에서 중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편집자 주]

■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사회기여 프로그램 가동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회기여 프로그램과 자정노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정부도 민간의 건설문화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건설업계 중심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워 나가고 윤리경영을 확산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의 이러한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 및 사회공헌에 기여도가 큰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공생발전 확산 위해 생산주체 관계 개선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 결정·지급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① 원도급 단계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산정 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약식기성 제도를 활성화하여 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② 하도급 단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하도급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적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산재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PQ 심사 시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은 축소하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PQ심사 변별력 제고·기술제안 활성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PQ심사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활성화하여 업계의 기술력 향상 유도, 건설보증과 시공능력 평가를 통해 부실 업체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주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 금융지원도 지속·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공생발전 선순환체계 구축,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등은 일회성 이벤트나 단기간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민과 관이 하나로 힘을 모아 부단히 노력할 때 달성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도 공생발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은 설비건설업계를 대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해 10월 민관합동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건설단체 뿐만 아니라, 문화·홍보 등의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바 있다.

■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건의 내용



▲ 정해돈 회장(사진 오른쪽)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사진 왼쪽)에게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해야”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특히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2년간 유예를 시켜 주시고, 건설기능인들에게 훈·표창을 주셔서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여 원·하도급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입찰제도를 국토부 주관으로 도입하여 주시기를 장관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건설산업 공생발전 과제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 상위 100대 건설사 중 30여개사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상태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문건설업계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사가 경영을 잘못하여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도급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연쇄부도를 당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

운 일이며, 자재업계와 현장근로자까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이런 문제점과 저가하도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생발전의 대표적인 발주제도입니다.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을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금액제한 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하여 발주자의 선택권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우선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최저가공사까지 확대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건설업 진입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사고가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고 있습니다. 건설업 진입을 보다 강화하여 실적 미달업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